

민주, 국힘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 구성 제안

국회 청문회 요구...“불안 해소”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촉구 여야, 방류 특위 등 논의 착수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정부가 파견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맹탕 보고만 들고 돌아왔으며 국회 차원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및 검증 특위’ 구성을 여당에 제안했다.

송기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이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었지만, 이 브리핑을 본 국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만 더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위·과방위·외통위·농해수위·환노위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원들을 중심으로 오염수 검증 및 방류 저지 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찰단이 가져온 정보를 공개하고, 이 정보를 투명성·과학성·객관성의 기준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여당 역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고, 잠정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들 피해와 경제적 피해는 기정사실화돼 있다. 오죽하면 후쿠시마 현 인근 어민들마저 결사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제해양법 협약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분쟁해결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 평가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반드시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이행하여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히 지키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여당의 동참을 촉

구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국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찰단이 과연 무엇을 보고 왔는지,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연히 국민의 뜻을 모아서 해양 투기 반대 결의안도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2년 전에 국민의힘이 했던 결의안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특위 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여야 합의가 필요한 현안을 협의했다.

두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말할 게 없다”면서도, 다양한 안건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러 문제에 대해 논의했는데 무엇을 논의했다고 말씀드릴 만큼 결정된 게 없다. 특위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 궁금증이 많을텐데 저희 둘이 만나서 결정할 게 아니고 각자 당에 돌아가 당의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 앞으로 몇 차례 협의가 있을 것이다. 발표할 상황이 될 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병훈 “5·18 헌법전문 수록·군공항 시행령 개정” 촉구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사진)은 1일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 실천과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의 재정 부담 독소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5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시간표가 필요하다”며 “너나없이 5·18정신 계승을 외쳤지만, 5월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문제는 단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헌은 여야의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개헌 로드맵도 내놓은 적이 없다”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을 통해 개헌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도 주장했다. 그는 “광주와 대구·경북은 공항 이전 및 건설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동맹이었지만, 정부가 대구 경북에 없는 독소조항을 광주에 넣는 행위는 동맹을 한 번에 허무는 악수”라고 지적했다. 또 “광주군공항이 전특별법 시행령에만 재정 부담을 강요하는 독소조항이 존재해 삭제가 필요하고,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항 신설도 필요하다”면서 균형 있는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1580대 주차’ 광주송정역 주차빌딩 개장 광주송정역 인근에 주차빌딩이 완공됐다. 1580면 규모인 주차빌딩은 2015년 호남고속철도(KTX) 개통 이후 심각한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 지어졌다. 이용 요금은 기본 30분에 1500원, 10분당 5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되며 30분 내로 회차할 경우 무료다. 나건호 기자

박미정 시의원 “학동 참사 2주기 안전불감증 개선해야”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이후에도 대형 참사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민간 건축공사의 ‘휴먼 에러(human error·재해 요인 내 인간의 과오)’ 방지 대책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사진) 광주시의원은 1일 제31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분당 정자교 붕괴, 최근 서구 쌍촌동 오피스텔 공사장 노동자 압사 등 수많은 안전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됐다”며 “잇단 참사의 공통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치병인 안전불감증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 관련 특별법(시특법) 등 다양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하지만 지난해 초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서 보듯 제도적 장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휴먼 에러의 문제가 건설 현장에 따리를 들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도 학동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부실 공사와 전쟁’을 선포하고 민간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각종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이행 실태 감찰을 진행했다.

김혜나 기자

광주시, 제2차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600명 발굴 목표

내달 15일까지 온라인 설문

광주시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제2차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광주시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첫 실태조사 이후 3년마다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오는 7월 15일까지 45일간 진행한다. 조사대상은 6개월 이상 집안에만 머무르며 외부(가족 등)와 단절된 채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그 가족, 은둔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 총 600명 발굴을 목표로 추진한다.

조사내용은 △조사 대상자 성별·나이 △은둔 기간·계기 등 은둔경험 △신체·정신건강 △관계와 도움·서비스 및 활동 욕구 상담·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 형식으로 은둔형 외톨이 온라인 설문조사지 QR코드 또는 인터넷 주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지역 전문연구기관인(재)광주복지연구원에게 맡겼다. 설문조사 결과 희망자에 한해 심층면접도 한다. 오는 11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 이를 기반으로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한다.

광주시는 2022년 4월 전국 최초로 은둔

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설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홍보활동을 통해 당사자와 가족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은둔 당사자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과 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전국 최초로 실시한 제1차 실태조사를 통해 349명의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했다. 당시 응답자 가운데 20대와 30대가 51.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은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미만인 31.2%가 가장 많았다. 은둔 생활의 계기는 취업 실패와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성수 기자

신의준 도의원 “원전수 방류 수산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전남도의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전남지역 수산분야 피해를 우려하며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1일 열린 제372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신의준(더불어민주당·완도2·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85.4%가 오염수 방류 자체를 반대했고, 72%가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줄인다고 응답했다”며 “지난 2013년 원전 오염수 누출 때에도 수산물 소비 침체를 겪은 바 있다”고 우려



했다. 신 의원은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거부감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수산업계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는 무책임하기만 하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어업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 설치, 피해 대책 종합계획 수립, 수산업 피해 보전, 판매 촉진 등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형지 기자

‘전남관광플랫폼 서비스’ 내달부터 전 시·군 확대

전남도가 교통·숙박·식당·체험시설 등 관광 모든 영역에서 예약·결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전남관광플랫폼(J-TaaS·Jeonnam Travel as a Service)을 7월부터 전체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전남도는 전남관광플랫폼 서비스 확대 운영에 앞서 6월 한 달 간 사전 체험이벤트를 진행한다 고 1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에는 가입자 4000명에게 커피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또 플랫폼을 통해 상품 구매 후기를 남

긴 이용자에겐 추천을 통해 20만~30만원 상당의 경품도 제공한다.

이벤트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전남관광플랫폼(J-TaaS)’을 내려 받아 참여할 수 있다.

‘전남관광플랫폼’은 전남 관광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현한 모바일 기반 스마트관광 플랫폼이다.

실시간 예약·결제서비스를 비롯해 이를 통합 연계해 이용자 관점에서 빠르고 편

리한 맞춤형 스마트관광 편의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추천 여행코스·관광지·축제 등 전남의 다양한 관광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대중교통·숙박·맛집 등 각각 다른 분야 상품을 한 번에 장바구니에 담아 결제할 수 있어 하나의 플랫폼만으로 전남의 모든 관광 분야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관광플랫폼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 강화를 위해 영어·일본어·중국어(번체·간체) 등 다국어 서비스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최형지 기자